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논의(지자체의 입장에서 실행방안 제언)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의 인구소멸이 진행됨에 따라서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국회의원 법률안(11개)과 행정안전부 안 그리고 여러 의견이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입법 진행이 상당히 더딘 것 같다.

1. 문재인 정부가 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제시하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재 8:2에서 7:3 그리고 장기적으로 6:4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얻는 수입은 어떻게 봐야 할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세입 및 재정 처리)**

▶ 기부금 방식으로 수입 처리를 한다고 보았을 때 재정분권 정책과 무관하다.

2. 기부대상 지자체를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과 행정안전부 안을 통해서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고 있다. **(기부대상 지자체)**

▶ 고향사랑기부제가 법령으로 도입(제·개정)이 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용하려면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유는 조례 제·개정, 인력배치, 답례품 등을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법률안만 제·개정이 되면 지자체에서 즉시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다.

▶ 수도권 이외 지자체로 범위를 지정하여야 예측 가능한 업무가 수행 가능하다.

예) 행정안전부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자 2017.12.29.자로 지방세기본법 개정과 정원을 각 지자체에 1~2명씩 증원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인력배치는 올해 4월 말까지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34개 자치단체가 배치하였고, 순천시는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 마무리 후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2018.7.11.자로 하였다.

▶ 순천시는 납세자보호관을 지방세 경력이 7년 이상인 6급 직원을 감사과에 배치하면서 세무과 직원을 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받치는 상황으로 납세자보호관 배치로 세무과는 지방세 담당 경력이 없는 직원을 배치 받아서 일 처리를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3.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수전망 추계가 불확실하고, 부정확한 재원이다. 그렇지만 제도를 운용하려면 최소한 적정 인원이 있어야 한다. 순천시는 기존 정부안으로 세입 예상과 인력을 산출하였을 때 다음과 같다. **(인력 운용 및 활용)**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시 순천시 세입예상 현황(54억원)

(단위 : 명, 원)

출향민	경제활동인구	기부참여	기부액	세입예상액
300,000	60%	30%	100,000	5,400,000,000

-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가 54,000여 명을 예상하였을 때 적정 관리 인력은 2~3명 정도 예상이 되며, 또한 이 제도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징세비용(일본 14%)이 든다.
 - 따라서 제도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지속성이 있어야 신규고용과 설비투자가 있으며,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았을 때는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4. 기부금을 일정 금액(100만원) 이상 접수 시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지자체는 여러 가지 사업과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기부금을 지자체에 제공 후에는 다른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기부금 심사)**
- 예) 지역에서 인쇄업을 하는 업체가 순천시(세무과) 고지서 인쇄물 제작업체에서 제외되었을 때, 순천시에 민원을 넣으면서 순천시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최근 5년간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5. 지연 연고주의 해소 차원에서 고향 연고자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는 개인 참여가 필요하다. **(기부대상자 범위)**
6. 지역 답례품 제공 시 지역에서 생산·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특정 제품이 일정 비율(10~15%) 이상 차지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어 지역 제품이 골고루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답례품 상한선(기부금 대비 30%) 지정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답례품 제공)**
- 예) 일본 : 전자제품(디지털카메라, 로봇청소기 등)을 제공하는 지자체 존재
* 일본 고향납세 증가요인 : 답례품의 충실(57.1%), 고향세 보급·정착(57.0%)
7. 윈스톱 시스템(제도, 수납환경, 답례품 제공) 개발 운영이 필요하다. **(시스템 개발)**
-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하면 복잡한 납세지 제도가 있다.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주소지이지만,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지는 근무지이며, 이자소득의 납세지는 소득의 지급자이다.
 - 지방세가 전산화되면 그만큼 사람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일반인의 생각이다. 하지만 실제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지방세는 과세자료를 입력, 수정, 삭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작업으로 적정 인원의 인력이 필요하다. 이유는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부서의 자료가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방세 자료를 활용하는 데는 전산적인 활용이 가능하다.